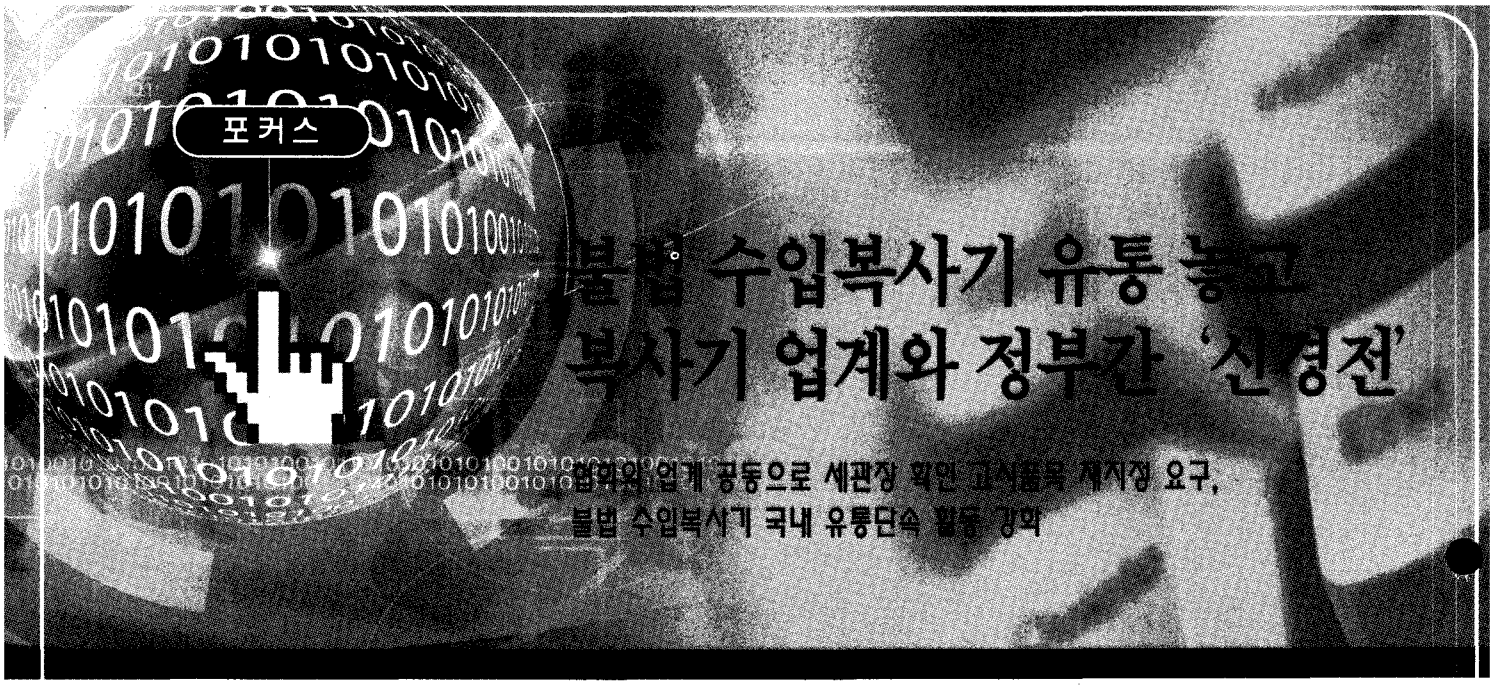

포커스

불법 수입복사기 유통 놓고 복사기 업계와 정부간 '신경전'

협회와 업계 공동으로 세관장 확인 고시품목 재지정 요구, 불법 수입복사기 국내 유통단속 활동 강화

불법 수입복사기 영업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는 복사기 업계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복사기의 근절을 위해 관세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3월과 4월중에는 불법 중고복사기 수입 및 유통에 따른 피해 및 문제점에 대해 업계와 관련 단체 및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지난 호에도 본 협회와 복사기 업계가 불법 수입복사기 영업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관련법이 폐지된 후 중고 복사기가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관과정에서 '세관장 확인고시 품목'에 등재하는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신도리코, 롯데캐논, 한국후지제록스 등 복사기 3사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국무조정실 등에 관세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나선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시장개방과 역행될 뿐 아니라 통상마찰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 양측간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이다.

업계, 외국인투자지원센터·국무조정실 등에 대책마련 요구

지난 3월 9일에는 '불법 중고복사기 수입 및 유통에 따른 피해 및 문제점'과 이의 해소책 강구를 위한 간담회가 KOTRA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산자부, 관세청 등 관계자를 비롯하여 복사기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 협회 등 관계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중고복사기와 관련한 현안 및 대책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월 23일에는 무역위원회 심결정실에서 역시 업계관계자와 정부측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중고 복사기 불법 수입 방지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법 수입 복사기 유통으로 인한 복사기 업계와 정부와의 마찰은 지난 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관련법이 폐지되면서 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사기는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99년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업계에서는 지난 2000년 불법 중고복사기 수입이 5,016대로 전년에 비해 9.5% 증가했고, 2001년 5,658대(16.6% 증가), 2002년 7,583(17.6% 증가), 2003년 7,939대(33.7%)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피해가 커지고 있고 불법제품의 기승으로 복사기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

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불법 중고복사기 수입대수가 실제 관세청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사기 업계는 불법 중고복사기의 대량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며, 복사기 제조업체의 피해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 복사기 제조 3사는 450여개의 협력업체와 35,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피해 급증시 국내 생산과 고용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자부와 관세청 등 정부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WTO도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어 복사기 업체들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을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롯데캐논은 내수 점유율의 40% 이상을 불법 수입복사기에 잠식당하고 있고, 한국후지제록스는 20%, 신도리코는 10%씩 잠식당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표 2 참조). 만약 정부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한국내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고시, 불법 수입 복사기 유통 초기 단계부터 방어해야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는 이미 여러 번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법 수입 복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문제는 시장개방화로 인한 현행 법규상 아무런 제재없이 중고기의 세관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사기(신품, 중고)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복사기가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서 제외된 후 이를 악용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 · 판매하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많아져 국내 시장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와 업계는 '불법 수입 복사기 유통방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을 통해 불법업자를 소멸시키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수입중고 복사기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처음 국내 유입되는 시점부터 창구에서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불법 수입 중고 복사기 유통의 대응방안으로 처음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확인하는 품목에 추가(HS 9009.12-0000)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8일 관세청장 앞으로 중고복사기 불법 수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과 4월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국무조정실에, 또 협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모아 4월에 산자부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직 이렇다할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지만 협회와 업계는 힘을 한데 모아 계속적으로 정부기관에 건의함은 물론, 불법 수입복사기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불법 복사기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표 1. 복사기 수입 현황

(단위 : 대)

복사기 수입대수(관세청)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입복사기 총대수	52,691	34,007	43,093	23,560
불법 중고복사기 수입대수	5,016(9.5%)	5,658(16.6%)	7,583(17.6%)	7,939(33.7%)

표 2. 불법 수입 중고복사기의 업체별 국내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 억원)

외투기업명	불법수입중고복사기의 국내시장 점유율	정품 복사기 연간 내수 판매액	수출액
한국후지제록스	20	1,748	522
롯데캐논	40	1,469	840
신도리코	10	2,200	3,800